

오류 많고 법원 판결보다 후퇴...“되레 5·18 왜곡” 성토

올해에도 광주·전남에서는 각종 이슈가 넘쳐났다. 지역민의 염원으로 40여 년 만에 진행됐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가 끝났고, 의정각등으로 상급 병원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떠났다.

또 각종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했다. 유흥가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순천에서는 길가던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문자마 범죄로 소중한 삶을 빼앗는가 하면, 고급 외제차로 퇴근을 하던 연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하는 일도 빚어졌다.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는 하룻길에 집에 가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쓰레기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음주운전 한터 유튜브버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해 숨졌다. 한 해 광주·전남의 이슈와 사건·사고를 돌아본다.

올해의 광주·전남 이슈 <1>5·18진상조사위 보고서 부실 논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6월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1980년 5·18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국가 공인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5·18 자료를 수집하고 5·18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 사실 기록, 계엄군이 저격수까지 운영하며 민간인을 ‘조준 사격’으로 학살한 사실 확인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발포명령자, 암매장·행방불명자 등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일부 조사 결과를 양비론에 의존해 결론을 못 내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점도 다수 발견되는 등 한계점도 보였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 조사 활동을 거쳐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15건을 진상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진상조사위가 수집한 5·18 관련 자료는 서류 284만여쪽과 4.5TB(테라바이트) 분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980년 5·18 전후로 청와대와 국방부, 계엄사령부(육군본부), 광주에 파견된 공수특전여단과 제20·31사단,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중앙정보부, 경찰, 검찰,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관련 기관이 생산·보관한 기록물을 총망라했다.

또한 1800여건의 과거 5·18 피해자 증언과 법정 기록, 미국·일본 정부 등의 기밀 문서, 신군부 주요 인물과 계엄사령부 지휘부, 현장 지휘관, 시위집합

서류 284만여쪽 역대 최대 자료 발포명령자·암매장 끝내 못 밝혀 조사 결과 일부 결론 뒤바뀌기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 한계 드러내 광주일보 제공 사진자료 토대 대검 장착·기관총 실탄 장전 확인도

현장에 직접 투입된 사병 등 1520명의 군 관련 기술 기록과 민간인 사망자, 행방불명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1158명의 민간인 기록 등도 확보했다.

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가 제공한 5·18 사진자료를 토대로 광주 투입 계엄군이 대검을 장착한 사실, 1980년 5월 21일 집단발포 이전부터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한 사실 등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기도 했다. 5·18 기간 사망자 166명 가운데 총상 사망자를 135명으로 규명하고 시민군의 사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26명(갑빈 총상) 중 25명이 계엄군의 총탄(M16)에 희생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성과도 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호용 등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14명을 내란목적살인, 집단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계도 명확했다. 군의 발포명령과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암매장된 행방불명자의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권한인 청문회조차 조사 미흡으로

무산되면서 5·18 가해자들을 증언대에 세울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국가 차원의 조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 등 보수 성향의 위원들의 지적으로 조사 결과 일부의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합보고서 발간에 앞서 미리 공개한 개별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오류가 발견될 뿐 아니라 기존 과거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시민군인지 계엄군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나주 무기고 피습 사건은 무기 피탈 시점을 엇갈리게 진술하고 ‘진위 여부 확인 불가’ 결론을 냈으며,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을 검증 없이 무차별 인용하고 나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오히려 5·18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불체박·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가 미완의 조사 성과를 내놓고 활동을 종료한 데 따라 지속적인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국가 보고서의 미진한 점을 보완할 민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상조사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조사 내용도 다룰 수 있으며 보다 유연한 해석과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5·18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발포명령자, 군 발포명령,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항구적인 5·18 조사·연구 기관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나라리커뮤니티빌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화제의 판결

교통사고 처리비용 압박 받고 결근 기간 숨졌다면 버스기사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언제?

1심 “숨진 당일”·2심 “가출한 날”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회사로부터 전가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결근 기간에 숨졌다(2021년 6월 23일 광주일보 6면)면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언제일까.

현행법상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1심은 숨진 당일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출한 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버스기사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응인 등 처분취소 소송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제 버스기사로 2년을 일하던 A씨는 정규직 전환 후 11일 만에 발생한 4차례의 사고 처리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사고처리(보험) 말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견디다 못해 숨졌다.

개인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던 끝에 A씨는 아내에게 “미안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문자를 보낸 뒤 5일간 출

근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업무중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후 A씨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문제가 됐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급여, 산재 보험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5일간 무단 결근을 했다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결정(6만 9862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에게 남긴 메시지 등을 보면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인식능력이 낮아져 정신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결근한 5일간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해 결근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원심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결근한 기간동안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A씨 스스로 판단해 무단 결근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인 가출날까지 산정해야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 소재지구 개발 비리 의혹’ 정기명 시장 입건

간부 공무원·건설사 관계자 등도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수소재지구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소재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기명 여수시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장 외에도 여수시 간부급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브로커 2명도 입건돼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재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은 소재지구 개발사업 담당 부서인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혜의혹을 받는 건설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한편,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여수시 소호동 일대에 2150억 원을 들여 주택과 근린생활·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치과병원 폭발물 70대 정역 2년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린 70대에 정역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현주건 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시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터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제폭발물을 만든 후 택배를 전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폭발물이 든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고 불을 붙여 터트렸다.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가 발생해 병원 일부가 불에 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